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63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18.

발 의 자 : 장종태 · 박용갑 · 김 윤  
이수진 · 문진석 · 김기표  
황정아 · 장철민 · 박정현  
조승래 · 안태준 · 안규백  
정동영 · 김남희 · 김선민  
이원택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올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사 제공 일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.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·한부모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임.

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 수급 부족이 예상되며, 그 외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들도 인력 배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임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

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,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,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설).

##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우선지정일자리 선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(이하 이 조에서 “우선지정일자리”라 한다)를 선정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우선지정일 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우선지정일 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 안
<u>&lt;신    설&gt;</u>	<p><u>제15조의2(우선지정일자리의    선정   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 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 자리(이하 이 조에서 “우선지정일자리”라    한다)를 선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  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를    고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시·도지사는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시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   우선지정일자리   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